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포스트코로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언택트 어버니즘 전략 연구	손동필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장민영
	인구축소에 따른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한수경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생활권 공공공간 계획·설계 및 관리 개선 방안	김용국
	스마트건축 산업화 모델 및 제도 기반 확충에 관한 연구	김은희
	보편적 스마트도시 개념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계획 및 서비스 개편방안 연구	조상규
	민간제안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통한 건축규제 유연화 방안 연구	이여경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업무 효과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박석환
	쇠퇴지역 공간밀도 관리를 위한 빈집 활용기준 개선 방안	김민경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자원 활용체계 구축방안 :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변은주

auri

기본과제

❶ 포스트코로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언택트 어버니즘 전략 연구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동안 한국에서 9만 7,000여 명의 확진자와 1,700명 가까이 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다(3월 19일 기준).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와 사회변화를 일으켰다. 이로 인한 제조업 붕괴, 관광수지 악화, 대량 실업자 발생 등 대공황과 비견되는 사회적 위기도 발생시켰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기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변화의 계기로 인식하고 사회 전반적 변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긴급한 위기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별진료소와 같은 도시시설의 임시적 활용과 향후 인구·사회학적 환경 변화에 맞는 가변적·일시적 건축 및 도시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대도시 중심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한 미래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 수립과 ▲도시 전체적으로 템포러리 어버니즘(Temporary Urbanism)을 기반으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한 제도 개선, 그리고 ▲신속한 위기 대응책 마련과 이를 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비접촉·비대면식 도시정책 의사결정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전개될 사회적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의 대응방안을 고찰하고, 비대면(Untact)·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회복력 및 포용성(Resilience & Inclusiveness)에 기반하는 도시공간 변화의 미래를 예측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적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가변적·일시적 건축 및 도시 공간을 제시하고,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는 도시 차원의 스마트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언택트 어버니즘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손동필

❷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지방도시의 인구감소는 지역경제 침체와 마을활력 저하, 도시쇠퇴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젊은 층의 인구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도시 인구 유입책으로 청년층 지방이주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해야 할 시책에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었다. 각 지자체에서도 외지청년을 유치하기 위한 청년시범마을 조성, 창업지원, 한 달 살아보기 등 여러 대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도시로 청년층을 유입하기 위한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정책이 다수 추진되고 있지만 이주단계에 집중된 단발성 지원방식으로 인해 지역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노마드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조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기반이 되는 공간보다 청년센터와 일자리센터 등 지원시설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운영자나 이용자 측면보다 공급자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현행 정책에서 지방이주는 주로 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청년활동공간 조성은 유휴공간 활용이나 도시재생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 간 연계 추진전략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간의 이용률은 저하되고 지속적인 운영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살이를 위해서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되는 청년공간뿐만 아니라 청년이 직접 운영하거나 거주하는 공간 등을 효과적으로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주에서 정착, 정주지속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청년수요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도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청년의 지방이주 단계와 이주청년의 특성, 지역자원, 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청년활동공간 조성 기본방향과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추진체계와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부처별 청년지원사업의 연계방안과 적정 지원시기, 지자체 부서 통합형 지방이주 지원체계 등을 도출함으로써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 여건 마련과 청년활동공간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장민영

❸ 인구축소에 따른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물결이 거세짐에 따라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빈집'이 전체 빈집의 1/3 이상(35.5%)이며, 그중에서도 '아파트 빈집'이 전체 빈집 수의 1/4(26.6%)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통계청 주택총조사)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독주택 위주의 빈집 대응책으로 인해 노후공동주택 빈집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도시지역의 빈집조사와 정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공동주택 빈집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적용에 한계가 따른다. 또한 기존 빈집 대책들은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주거지 재생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지원이나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 위주여서 증가하는 노후공동주택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다.

따라서 국내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체계적이고 정교한 빈집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경우 단독주택 빈집에 비해 소유 및 거주 관계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쉽게 철거할 수 없으며, 과거와 달리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수요가 낮기 때문에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활용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인구축소에 따른 도시공간 황폐화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관리·활용상의 문제와 주요 현안을 현장 기반으로 도출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단독주택과 차별화되는 공동주택 특성을 고려한 빈집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수경

4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생활권 공공공간 계획·설계 및 관리 개선 방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생활행태는 변화하였다. 도시공간 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실내 대규모 집합시설의 이용은 감소한 반면 감염위험률이 낮은 생활권 내 공공공간의 이용이 증가하였다. 생활권 내 공공공간의 이용빈도뿐만 아니라 이용목적, 이동수단, 이용방식, 동반자 유형 등 다각적인 이용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는 일시적인 팬데믹 현상을 넘어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엔데믹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생활권 내 공공공간 이용행태의 변화는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생활권 공공공간의 공급과 운영·관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생활권 공공공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감염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과 개별 공공공간 차원의 계획·설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주거 및 사업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도보·자전거·개인이동수단 등을 통해 접근 가능한 생활권 공공공간의 변화를 파악하고, 적정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개별 공공공간 차원에서 감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동선계획, 시설계획, 택티컬 어버니즘 등 실효성 있는 물리적 공간설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적 차원과 개별 공공공간 차원의 계획 및 설계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생활권 공공공간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과 유지·관리 방안 또한 함께 점검되어야 한다.

이에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권의 변화를 파악하고, 생활권공원·주제공원·녹지 등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공공공간의 계획·설계·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생활권 공공공간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용국

5 스마트건축 산업화 모델 및 제도 기반 확충에 관한 연구

ICT·빅테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담기 위한 스마트시티 사업 등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의 융합, 4차산업기술의 확대적용 요구는 산업 전반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건축·건설산업 분야도, 비록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못하였으나 오래전부터 BIM을 도입해 왔고 3D 프린팅이나 디지털트윈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기·공사비 절감, 공사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을 발표하며 '디지털'과 '그린'이 융합된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보면 건축산업 분야의 미래 모습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생산 및 사용과정에서 디지털 정보·첨단기술을 좀 더 쉽게 활용하고 완성된 건물에서는 새로운 정보도 수집함으로써 생산·관리 수준을 높여 갈 것이다. 또한 건물은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구감소나 기후변화가 가시화됨으로써 노동력과 자원을 절감하고 탄소배출 및 에너지 사용 감축을 요

구받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건축산업 패러다임 변화도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산업적 변화양상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생산방식, 공간 및 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새로운 건축방식으로 '스마트건축'을 제안하고 이의 개념 정의, 산업화 모델, 제도적 실행안 마련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이미 스마트빌딩이나 지능형 빌딩 등의 유사 개념을 적용한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고비용 건물로 국한됨으로써 한 분야의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위 4차산업으로의 국가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 스마트건축의 산업화는 건축 분야 자체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고, 따라서 서둘러 구체적인 산업활성화 전략 연구가 필요하다.

김은희

❻ 보편적 스마트도시 개념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계획 및 서비스 개편방안 연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이 지자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별 차별화에 대한 노력에 비해 스마트도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기반시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로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를 활용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업무 효율을 크게 개선시킨 사례이자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한 보편적 도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 안전망 구축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지자체의 각종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비롯한 112·119 등과 연계하여 지역 안전을 도모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안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나 시스템은 국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든 도시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도시별 특화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시범도시와 스마트챌린지 등 지자체에서 수립된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른 서비스 유형, 구성, 주요 내용, 사업 추진 성과 점검 등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편적 스마트도시에 대한 개념이 마련되고, 보편적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빠른 보급·확산을 통한 국민의 안전권 보장과 도시의 위기 대응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저해요소 및 각종 규제에 대한 제언을 통해 보편적 또는 특화된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상규

❼ 민간제안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통한 건축규제 유연화 방안 연구

정부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만들어 가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초기 규제개혁 정책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규제의 양적 축소에 초점을 두었으나, 단순히 규제를 줄이는 방식은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증진 등 행정규제의 집행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어 점차 규제 품질을 향상시키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혁신 정책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기존 규제개혁 정책과 차별화된 점은 규제 면제나 유예, 선허용-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등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규제를 지역 여건이나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규제의 유연한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규제의 유연한 운영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규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1991년 「건축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적

용의 완화(특례) 제도는 점차 예외로 인정하는 조건이 확대·구체화되고 있으며, 2014년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건축협정과 2016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의 제도가 제정됨에 따라 최근에는 창의적 건축디자인,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 건축행위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건축계획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구역 단위로 적용되는 건축규제 유연화 제도가 대거 도입되었다.

하지만 구역 단위로 적용되는 건축규제 유연화 수단은 대부분 공공이 우선적으로 구역을 지정하여야 작동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며, 이를 허용하기 위한 방식은 전통적 건축심의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건축규제 완화로 인해 도시환경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도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행 건축규제 유연화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활성화되면서도 이로 인한 도시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 방식과 규제 완화와 공공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행정과 민간의 '협상(Negotiation)' 방식에 의한 제도 운영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건축규제 유연화 수단이 각각의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이로 인한 도시문제 발생은 최소화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여경

❽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업무 효과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9년 12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공공건축물 조성 과정상 건축기획업무 수행을 의무화함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에서 이행 절차가 이전보다 체계화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건축기획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세부적인 지침이나 가이드가 부재하고, 건축기획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건축기획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이나 예산 등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는 않았다. 공공건축물 조성 관계자들이 건축기획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건축기획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제도의 문제점 및 성과를 진단하여 건축기획업무를 보다 내실 있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대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중 건축기획업무를 수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범위는 건축기획 이후에 설계·시공·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가 존재하지만 조사 대상 선별 및 자료 분석의 합리적 기준 설정을 위해 기획 이후 설계단계까지 완료한 사업에서 건축기획업무의 내용적 측면과 수행 여건적 측면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예상 결과물로 건축기획업무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건축기획의 실효성을 감안한 건축기획업무 항목을 보완하고 사업 유형 및 여건에 맞는 건축기획업무 항목을 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건축기획업무 수행 권장시기, 건축물 유형·규모별 합리적 건축기획업무 범위 및 적정 기획 대가 산정 방안,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절차와 연계성 강화 등 수행 여건적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축기획업무의 효과를 실제 프로젝트를 토대로 진단하여 제도적 필요성과 중요성을 검증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가칭)공공건축 기획업무 지침'의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석환

❾ 쇠퇴지역 공간밀도 관리를 위한 빈집 활용기준 개선 방안

국내 빈집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빈집 수는 100만 호를 넘어서고 있다(한국부동산원, 2020). 빈집의 발생은 일정구역에 밀집될 경우 지역쇠퇴를 가속화하고 지역의 공동화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앞으로 빈집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내 인구규모를 고려해 빈집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쇠퇴지역을 대상

으로 중앙 및 지자체에서 추진되던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에서는 지역 내 인구규모를 고려하지 못한 채 사업시행이 가능한 개별 빈집을 활용해 임대주택 또는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채우는 방식의 활용이 주를 이뤄 왔다.

이런 가운데 도시지역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의 필요성에 의해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법 제정을 통해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등 빈집 관리를 위한 체계 및 등급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 개정을 통해 빈집의 면적(面的) 활용 및 관리를 위한 빈집밀집구역 지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빈집의 활용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는 빈집정비계획의 내용은 개별 빈집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되어 지역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까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빈집밀집구역 지정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빈집 관리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현행 법·제도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빈집 철거방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면적(面的) 관리방식인 공간밀도 관리방안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빈집정비계획 및 빈집정비사업의 추진 실태를 분석하여 공간밀도 관리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기준 개선안 및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김민경

⑩ 호흡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자원 활용체계 구축방안: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의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우 과거 발생했던 메르스(MERS)나 사스(SARS)와 달리 전파력이 월등히 높아 지역사회 확산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사회의 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역수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등 생활방역과 비의료시설의 개념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종교시설·민간시설(기업체 연수원, 숙박시설 등) 등을 임시 전환하여 격리·치료시설로 활용한 것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는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을 긴급하게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설정보 파악 및 격리실 총량 확보의 어려움, 민간시설 사용에 대한 협의의 어려움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보건·의료 영역뿐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이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한 재난에 대비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관련 시설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사회적 자본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신종 감염병의 재등장을 고려할 때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후보지 선정기준 마련 및 DB 관리 등 공간자원 활용·관리 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도입된 생활치료센터의 확보절차 및 운영상의 문제점, 한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공간자원 활용체계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감염·확산의 특성을 갖는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사회 공간자원의 사전적 비축·관리계획 수립과 운영절차 그리고 주체별 역할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지역 단위까지 촘촘한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가 작동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변은주

남원 빌드-업(業)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건축공간연구원은 남원시, 남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공동주최하고, 도시공감협동조합 건축사사무소, 어라운디와 공동주관하는 '남원 빌드-업(業)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난 3월 31일까지 참가자 모집을 마쳤다.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흑돼지먹자골목으로 불리는 남원시 원도심 하정2길 일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 과정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청년 실전형 창업 과정이다. 예비청년창업자, 공간운영자 등을 발굴하기 위해 남원시에 거주하거나 남원시에 관심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프로젝트의 참가자에게는 저렴한 임대료에 청년활동과 창업을 위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공간 설계 및 조성을 지원한다.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브랜딩(1단계), 커뮤니티 비즈니스(1단계), 커뮤니티 임파워먼트(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를 통해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정체성을 재정립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2단계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실무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 코칭을 진행하는데, 1단계 참가자가 2단계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향후 프로젝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청년문화·창업공간의 구체적인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1 문화살롱특강 '인구감소 시대의 시민·문화·회관'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2020년 6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을 위한 운영 및 건축기획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8일 군산시민예술촌에서 '2021 문화살롱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군산시민문화회관에 관심 있는 군산시민과 기자, 예술가,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감소 시대의 시민·문화·회관'을 주제로 윤주선 부연구위원, 김보미 연구원, 채아람 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지역조사를 통해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위치한 나운동의 사람과 문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회관(Hardware)'이라는 키워드로 윤주선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시대를 맞아 만성적인 운영적자에 시달리는 공공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하는 장소(회관)의 형성 방법을 주목하고, 민간과 공공의 중재자 역할을 맡은 PPP에이전트의 개념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문화(Software)'를 키워드로 한 채아람 연구원은 모두에 의한 문화로서 '생활문화'를 알리고, 이의 사례로 지난해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 진행한 '2020 DIT FESTA'의 과정과 결과물을 공유하였다. 또한 나운동 생활문화를 엿보며 일상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는 수평적인 소통 현상을 말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시민(Humanware)'의 키워드로 발제를 맡은 김보미 연구원은 군산시민들과의 인터뷰와 지난 2월 공모한 군산시민문화회관의 사진공모전 출품작을 소개하며 군산시민이 기억하고 바라는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전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각계각층의 참가자들이 프로젝트의 운영방식, 홍보활동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군산시민문화회관 재생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군산시민문화회관 재생사업을 '프로젝트 거인의 잠'으로 명명하고, 앞으로도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의 과정을 영상, 소식지 등 홍보콘텐츠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